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상이한 조합에 따른 경제성과와 복지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안 상 훈*

1. 서 론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호연관성을 타진하고, 상이한 생산-복지체제의 연계 속에서 경제적 성과와 복지수준에 어떤 차이가 노정되는지를 추적·비교한 비교사회정책학 연구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중심목표가 성장과 분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양대 목표가 과연 ‘두 마리 토끼’인지 ‘일석이조’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이 없다. 현대복지국가의 제반현상, 특히 그 위기의 원천에 관한 우리 학계의 지식축적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복지국가의 경제적 기초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보호의 ‘생산적 기능(productive function)’에 관해서는 별다른 학술적 주목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¹⁾ 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복지국가의 진보적 기능, 즉 재분배적 측면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인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 소모적이거나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복지의 생산적 성격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분배 뿐 아니라 성장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복지국가 체제와 더불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생산레짐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조응하는지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른 말로 하면,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성격이라는 차원에서 양자간에 어떠한 연계성이 파악되고, 양자의 연계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성과가 결과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생산적 복지를 성장과 분배의 견지에서 평가한 안상훈(2002)의 연구는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외사례이다.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²⁾

사실상, Esping-Andersen(1990)이 우리에게 상이한 복지체제에 관한 화두를 던졌을 때, 생산체제에 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다(안상훈,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분배정치’에 보다 몰입한 나머지 복지체제가 생산체제와 조응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견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대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떤 분배론자도 복지발전을 위한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도대체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양자간의 관계가 성장과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노정하게 되는지에 관해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연계성이 어떤 측면에서 제기되는지에 관한 제도주의적 관점의 설명들을 살펴보는 데서 논의를 출발하도록 하자.

2.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그 연결고리

지난 세기의 마지막 십년을 통하여 붐을 일으켰던 중요한 사회과학적 관점의 하나가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현대국가의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종류로 분기되어 진행되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비교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접근(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이 관심을 끌었고, 비교복지국가론 분야에서는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 접근(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approach)’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사실 양대 접근 간에 공유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체제와 사회적 보호체제 사이의 접합점 혹은 연결고리를 밝히려는 학술적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복지국가의 체제분화와 자본주의의 다양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 제기는 본 연구의 화두이기도 하다(cf. Ebbinghaus and Manow, 2001; Kitschelt et al., 1999; Huber and Stephens, 2001).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생산의 사회적 체계, 즉 일국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Hollingsworth and Boyer, 1997).³⁾ 이러한 연구의 맥은 조직화된

2) 우리는 우파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복지가 소모적이라고 공격하거나, 좌파진영에서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강변할 때, 답변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만, 복지를 하나의 선업(善業)으로서, 가치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본 연구는 복지국가에 대한 좌-우파로부터의 다양한 공박에 대해 보다 건설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하리라는 절박함에서 출발한다.

3) Ebbinghaus and Manow(2001)에 의하면, 이러한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의 세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체제의 제도적 구성요소의 기능에 관한 체계적 설명, ② 국가수준의 생산모델과 그 비

자본주의에 관한 신조합주의 관점(neo-corporatist perspective)의 연구로 이어지며(Schmitter and Lemburch 1981; Lemburch and Schmitter, 1982; Goldthorpe, 1984, among others),⁴⁾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일정정도의 이론적 수혈을 거쳐 본격적인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비교정치 경제학 연구로 발전하게 된다(Iversen et al., 2000; Hall and Soskice, 2001; Berger and Dore, 1996; Crouch and Streeck, 1997; Hollingsworth and Boyer, 1997; Hollingsworth et al., 1994, among others).

자본주의를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복지국가에 주목하거나 할 것 없이, 제도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연구들은 상이한 생산레짐, 노사관계, 사회적 보호 체계 사이에 모종의 ‘제도적 상보성(制度的 相補性: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Huber and Stephens(1999)는 특정 국가 내부에서 상이한 복지국가의 측면들과 상이한 생산레짐의 측면들이 상호 ‘조화(fit)’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러한 조화가 다소 난삽한 형식으로 얽혀있어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파악되지 않지만, 양자간의 조화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Ebbinghaus and Manow, 2001).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명제는 결국 복지체제와 명백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수렴이나 확산이냐의 논쟁은 지난 세기말 비교사회정책학과 정치경제학의 주된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개별 국가 혹은 국가군의 제도적 집락이 존재한다는 관점이 다수설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이다(Boyer, 1996; Kitschelt et al., 1999; Rhodes and Apeldoorn, 1997). 개별국가의 경제는 사회적 제도, 통제, 그리고 통치형식에서 상이한 조합을 가지고 있다. 국민국가가 다양한 조정에 관한 법적통제를 독점함과 동시에 그러한 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국가간에 조정의 형식에 있어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Hall, 1997).

그런데, 개별국가 혹은 국가군은 왜 특이한 종류의 제도적 발전을 보이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도적 동형태(institutional isomorphism)’에 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DiMaggio and Powell(1983)은 제도적 특징을 공유하는 동형태의 복제를 통해, 경제적 활동의 국가적 형식인 사회적 메커니즘이 창출된다고 지적하였다. 덜 구조화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은 유사한 종류의 구조화된 상황, 즉 유사한 상황의 규칙으로서 잘 조직된 제도 아래서

교우위의 유형화, ③ 제도가 어떻게 행위자들의 행위를 형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그것이다.

4) 정부, 노동, 고용주 관계에 주목한 조합주의 연구들도 사실상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다양성에 관한 문헌들이 기업(enterprises), 금융제도(financial institutions), 정부 관계에 주목한데 비해(Albert, 1991; Soskice, 1991; Hollingsworth, Schmitter, and Streeck, 1994; Hall, 1999), 조합주의 연구들은 의사결정의 측면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Schmitter and Lemburch 1981; Lemburch and Schmitter, 1982; Goldthorpe, 1984, among others).

의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양식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관한 유추를 통해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혹은 변화하는 제도의 형식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다(Dore 1997). 그리고 이렇게 생성되는 제도는 한 국가 내에서 매우 조직적·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의 특정모델들이 제도적으로 그 하위체계들과의 일관성 속에서 조직됨으로써 배타적으로 구분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근자의 경제적 범세계화 속에서 상이한 종류의 제도관련 모델들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쟁하고 있다면, 각기의 모델들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존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Ebbinghaus and Manow, 2001).

이러한 인식은 제도주의적 모델들에 관한 비교연구를 촉발시켰다. 제도적 분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근자의 비교 정치경제학은 실제로 경제적 활동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이분법(dichotomy)을 양산한 바 있다. 예컨대, 포드주의 생산 대 특화된 생산(Piore and Sabel, 1984),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대 라인 자본주의(Albert, 1993), 탈규제적인 정치경제 대 제도화된 정치경제(Crouch and Streek, 1997), 조정된 시장경제 대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Soskice, 1991, 1999) 등과 같은 양분법은 이러한 제도적 유형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⁵⁾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마지막에 언급된 Soskice류의 분류법이며 <표1>에 그 내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1> 두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사례	• 미국, 영국	• 독일, 일본, 스웨덴
금융 경제관리 방식	• 단기적 금융시장 균형 (주주 중심) • 제한적인 사업조정, 독점금지법	• 장기적 자본부채 감당 (자금관리자 중심) • 강력한 사업연합회, 회사間 연결망
생산체계	• 미숙련 생산 • 대량생산 • 산술적 유연화	• 고숙련 생산 • 고급 질적 생산 • 유연적 특성화
노사관계	• 탈중앙적 협상 • 논쟁적 작업장 관계	• 조정된 협상 • 노동자대표참여 법적 보장
훈련·고용	• 일반교육 중심 • 단기 채직, 잦은 이직, 회사間 이동	• 직업훈련 중심 • 장기 채직, 낮은 이직률, 회사 내 이동

출처: Ebbinghaus and Manow(2001); Soskice(1999, 1991); Hollingwork and Boyer (1997)

5) 이러한 이분법은 경험적으로 혼성(hybrid)적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지수화된 조정점수를 사용하여, 복지체계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타진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비교사회정책에서의 복지체제에 관한 논의도 생산레짐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연계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Esping-Andersen(1990, 1999)의 복지체제 연구만 예로 들더라도 이미 생산레짐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의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체계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분석됨으로써 국가적 생산체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이렇게 분석된 복지체제는 집락(cluster)을 이루는 것으로 판명되어 제도적으로 구분됨이 강조된다.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관계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에서는 복지와 경제의 연결고리가 보다 명시적으로 천명되어 있기도 하다.

요컨대, Esping-Andersen이 그의 연구에서 체제(regime)를 중심 개념으로 삼아 복지국가의 집락을 증명한 것은, 국가와 경제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법적·조직적 특징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상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자본주의 생산레짐에 관한 논의들과 동일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Lange and Meadwell, 1991). 이러한 인식은 그 이전의 복지국가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로부터 명시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제공의 원칙에 있어 매우 상이한 체계성을 내포하는 집락이 존재한다는 식의 복지체제를 중심으로 한 탈수렴론적 인식이다.⁶⁾

물론, Esping-Andersen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이 복지국가체제와 생산체제의 상이한 결합에 관심을 가진바 있다. Titmuss(1974)는 잔여적(residual) 모형, 산업적 성취·공로지향(industrial achievement-merit oriented) 모형, 제도적(institutional) 모형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하였으며, Mishra(1984)도 분화적·다원주의적 복지국가와 통합적·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구분을 통해 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이 상이한 모델들을 ‘묘사’한데 그친 반면, Esping-Andersen은 보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학문적 시도라고 칭송될만하다.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를 현대적 경제체제의 조직과 계층화를 결정하는 근본적 힘이라고 규정하면서, 전후 자본주의의 상이한 모델을 구성을 파악하는 모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몇몇 연구들이 복지국가와 생

6) Esping-Andersen의 1990년 저작,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이후, 제도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복지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비교사회정책학의 화두로 자리를 잡게 된다. 복지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이러한 관심은 20세기의 진보적 사회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복지국가를 찬양했던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종언과 더불어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속에서 복지국가의 전반적 몰락이 필연적인 역사적 귀결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산레짐의 관계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주로 특정 측면에 국한된 질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복지국가가 현대 자본주의의 다른 특징들과 실증적으로 공변하는지(covariance)의 여부에 관한 통계적 분석은 적어도 체계적인 방식으로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Esping-Andersen(1990)의 경우에 노동시장과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치중하였다. 특정 종류의 복지국가는 특정 종류의 고용체제를 결과하는데, 전반적인 실업률, 노동시장참여의 성적 차이, 실업지속기간, 숙련노동의 비율,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의 경로 등이 실제로 복지국가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Huber and Stephens(2001)는 보다 넓은 국면에서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조응을 탐색하고 있으나, 질적인 언급을 보다 체계적인 분석으로 승화시키고 있지 못하다. Ebbinghaus and Manow(2001)에서도 다양한 부문에 걸친 양자간의 연계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특수한 측면에 국한된다. 일단, 본 연구는 보다 넓은 국면에서 양자간의 연계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제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의 준거를 채택하는지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즉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복지체제는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효과정도와 노동시장의 계층화상황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면서 상호배타적으로 구분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복지체제로 모든 종류의 복지국가를 포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무수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Esping-Andersen, 1999). 여기서는 제4의 체제에 관한 Castles and Mitchell(1992)의 비판적 주장과 이를 수용한 Huber and Stephens(2001)의 수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4가지 복지체제를 본격적인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먼저, ‘임노동자(wage earner)’ 복지국가는 호주, 뉴질랜드라는 대척지(Antipodean)국가들을 가리킨다. 이 체제는 임노동자인 남성부양자(male breadwinner)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체제를 특징으로 하며, 사회보장급여는 소득조사에 기반한 잔여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고, 사회적 서비스는 별로 발달하지 못한 특징을 지닌다. ‘기민주의(Christian democratic)’ 복지국가는 Esping-Andersen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체제를 가리킨다. 이 체제는 분절적(fragmented), 고용중심(employment-based)이며, 포괄적인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 이 체제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본질적으로 남성부양자(male breadwinner)모형이다. ‘사민주의(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는 보편주의(universalism)에 기초한 포괄적이고 시민권에 기초한 소득보장을 특징으로 한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이 체제는 성평등적(gender-egalitarian)이며 노동운동의 전통이 강한 매우 진보적인 성격을 담지 한다. ‘자유주의(liberal)’ 복지국가는 잔여적(residual)이고 매우 부분적인(partial) 욕구만을 공공 부조중심의 복지를 통해 해결하며 사회보험이나 사회적 서비스는 발달하지 못한다는 특징

을 지닌다.

복지국가의 체제분화는 Esping-Andersen(1990, 1999)이 너무 유명한 까닭에 따로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이지만, 생산레짐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산레짐의 범위는 산업, 금융, 노동, 자본가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 전반에 걸쳐 있으며 이는 양자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근자의 시도들이 포괄하는 범위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Huber and Stephens, 2001). 단,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주로 임금, 고용, 투자 수준으로 그 범위가 한정될 것이다. 덧붙여, 이 연구에서 말하는 생산레짐은 행위자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에 둔감한, 유인(incentives)과 강제(constraints)의 국가적 틀거리/framework)로서의 생산제도(production institution)를 의미한다(Soskice, 1994). 요컨대, 변화보다는 체제적 특성 분류에 집중해서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표이다.

3. 상이한 생산-복지 결합(production-welfare nexus), 그 경제성과 복지수준

1)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의 대상이 되는 OECD 회원국으로는 18개의 선진 복지자본주의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포함된다. 복지체제의 구분은 Esping-Andersen(1999)를 수정·보완한 Huber and Stephens(2001)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는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s),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는 기민주의 복지국가(Christian democratic welfare states), 마지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임노동자 복지국가(wage earner welfare states)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될 자료의 시점은 1980년 전후로서 이 시기는 복지국가 황금기를 통한 발전이 정상에 도달하는 때이다. 지금까지 많은 복지체제연구가 제시된 마당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탐구해야할 주제는 지난 시대의 회고보다는 복지체제의 최근변화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관계성 탐구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를 통한 복지국가발전이 완성되는 시점이자

복지국가의 위기를 포함한 최근 변화의 단초가 마련되는 1980년경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작업은 최근변화에 관한 후속과제를 위한 이론적·실증적 출발선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Allan and Scruggs, 2001).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OLS 더미변수 회귀분석을 채택한다. 사실, 독립변수에 명목변수인 체제더미만 투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ANOVA와 유사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을 채택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많다(류근관, 2003).⁷⁾ 그러나, 회귀분석이 ANOVA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김두섭·강남준, 2000), 첫째,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며, 둘째, 추가적 계산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복지체제더미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복지국가 및 생산레짐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⁸⁾을 종속변수로 채택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체제에 따라 해당변수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체제더미를 투입한 경우 상수항과 체제더미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Nielsen and Gaddy, 1998; 안상훈, 2002; Gujarati, 1995),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점을 지나는 회귀선을 추정하였고, 이 또한 회귀분석 방법을 채택한 중요한 이유이다.

2)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호작용

이제 아래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복지체제에 관한 논의와 생산레짐에 관한 논의의 연결고리를 경험적 증거를 중심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체제별 특성변수의 계수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분석은 4가지 체제의 채택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검증으로서, 4가지 체제가 기존에 제안된 주요 복지특성관련 변수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닐 경우에만 4종류의 복지체제를 중심으로 생산레짐과의 상호연계를 타진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석이다. 앞으로 제시될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과 자료의 출처는 <부표1>을 참조하기 바란다.

(1) 복지체제의 특성

먼저, 각 복지체제의 특성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은 복지

7) 이러한 종류의 분석에 연속변수가 독립변수로 투입되면, ANCOVA와 동일한 것이다.

8) 여기서 투입·분석된 변수에 관한 자료출처는 따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Huber and Stephens (2001)에서 확보된 것이다.

노력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 바 있다.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 입각한 일반적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민주의에서 GDP 대비 23.5%를 사회보장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민주의에서의 21.4%, 자유주의와 임노동자 복지체제에서의 각각 15.25%와 13.5% 지출수준과 비교할 때, 사민주의와 기민주의가 나머지 두 체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복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표2> 복지체제별 복지국가 특성변수⁹⁾

체제	사회보장지출	이전지출	공공보건지출	공공연금지출	비노인지출	탈상품화
사민주의	23.50	14.50	88.50	77.00	10.80	36.00
기민주의	21.40	18.43	76.71	68.29	7.63	29.29
자유주의	15.25	11.50	74.75	60.25	6.55	20.50
임노동자	13.50	9.00	73.00	73.50	(2.95)	15.00

주: 괄호로 묶인 이텔릭체의 계수값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함.

GDP 대비 이전지출의 백분율은 기민주의에서 가장 많고, 사민주의, 자유주의, 임노동자 복지체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사회보장비에서 이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자면 기민주의체제 86%, 자유주의체제 75%, 임노동자체제 67%, 사민주의 62%로 나타난다. 비이전지출에 사용되는 지출액수준은 사민주의가 GDP 대비 9%수준으로 여타 체제가 3-4% 선인데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민주의체제에서는 데모그란트(demogrant)류의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각종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사민주의의 경우, 여러 학자들이 소위 ‘사회서비스국가(social service states)’라고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 바, 여기서의 분석결과도 이러한 명칭의 타당성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sping-Andersen, 1992; Stephens, 1997; Huber and Stephens, 2001).

다음으로는 총 보건지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인 공공보건지출 변수를 보자. 사민주의 체제에서 88.5%로서 다른 세 체제 보다 월등히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세 체제는 75% 부근에서 분포하여 그 상대적 크기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민주의, 자유주의, 임노동자 체제 순으로 공공보건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9) 앞으로 제시될 체제더미 회귀분석의 결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추정할 까닭에 R² 수치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사용되기 힘들다. 단, 거의 모든 분석결과에서 .90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다음의 복지국가 특성관련 변수는 공공연금지출이다. 이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민주의체제, 임노동자체제, 기민주의체제, 자유주의체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앞의 두 체제에서는 공공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특히 무기여 기초연금의 급여적절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연금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비노인인구의 복지에 사용된 지출은 사민주의, 기민주의, 자유주의, 임노동자¹⁰⁾ 체제 순으로 높다. 기존의 연구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여 한 나라의 복지정치에서 젊은 층의 조세반동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는데(Ahn, 2000; 안상훈, 2002),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결시켜 해석하자면, 사민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음 변수는 Esping-Andersen(1990)의 탈상품화지수이다. Esping-Andersen(ibid.)은 탈상품화지수의 체제별 수준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바 없고 대략적인 분류만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체제별 탈상품화지수는 사민주의에서 36, 기민주의에서 29.29, 자유주의에서 20.5, 임노동자체제에서 15이며, 이러한 수준의 차이는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확인된 여러 변수들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제안한 바 있는 복지국가 특성변수들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변수들이 4가지 복지체제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2) 복지체제별 노사관계

조직화된 노동과 자본은 사회적 협약의 당사자로서 현대 복지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Pierson, 1995; Ahn, 2000; Swenson, 1991, 1999; Esping-Andersen, 1992). 특히 노동조합과 사용자조합 사이의 '집합적 협상(collective bargaining)'의 여부와 협상방식이 복지국가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근간의 연구결과를 보면 그 역도 성립된다(Ahn, 2000; Ebbinghaus and Manow, 2001). 임금협상이 사회적 임금¹¹⁾을 전제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협상에서의 게임의 규칙은 본질적으로 복지국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쌍방향적일뿐만 아니라 순환적이기도 하다. 예컨대, 집합적으로 협의된 임금수준은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업률을 결정짓고, 실업률은 다시금 복지국가 재정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간접세인 소비세(consumption tax)보다 근로 소득세(payroll tax)에 크게 의존하는 복지국가의 경우는 실업률 증가가 복지

10) 그러나, 임노동자체제의 계수는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못하다.

11) 사회정책에 따른 비임금성 노동비용을 의미한다.

국가 재정악화를 직접적으로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복지제도와 생산제도 특히 복지제도와 노사관계제도는 하나의 거시적 순환고리 속에서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3> 복지체제와 노사관계 특성변수

체 제	노조조직률	단체협약률	중앙협상	조합주의지수
사민주의	67.25	84.33	0.56	3.50
기민주의	37.14	77.80	0.29	3.00
자유주의	35.50	34.33	(0.14)	1.75
임노동자	42.00	73.50	0.57	(1.00)

주: 괄호로 묶인 이텔릭체의 계수값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함.

<표>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인 노조조직률, 단체협약률, 중앙협상, 조합주의지수(corporatism index)가 복지체제별로 어떠한 값의 차이를 지니는지 보여준다. 사민주의는 노조조직률에서 다른 복지체제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임노동자체제, 기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체제 순으로 노조조직률의 수준에서 평균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단체협약률도 사민주의가 8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민주의와 임노동자 체제에서 각각 77.8%, 73.5% 수준으로 뒤를 이으며,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34.33%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다른 체제들로부터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협상 역시 사민주의와 임노동자 체제가 0.56, 0.57로 막상막하로 앞서가며, 기민주의 0.29, 자유주의 0.14의 수준으로 앞의 두 체제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¹²⁾

노사관계의 상황을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노사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한 나라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조합주의(corporatism)로 연결된다. 조합주의지수도 세 체제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여준다. 사민주의에서는 3.5, 기민주의는 3.0으로 나타나, 자유주의의 1.75와 임노동자체제의 1.0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엇보인다.¹³⁾ 다만, 임노동자체제는 중앙협상과 단체협약이라는 직접적인 임금협상 테이블을 중요시한다는 면에서는 돋보이지만, 전반적인 조합주의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면에서는 독특하다.

12) 자유주의체제의 계수값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13) 임노동자 체제의 조합주의지수값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못하다.

(3) 복지체제별 거시경제상황 및 제도

<표4> 복지체제의 거시경제적 차이

체제	무역개방도	자본자유화	중앙은행독립	조정지수	총세율
사민주의	58.25	1.98	0.29	0.72	49.25
기민주의	54.43	3.13	0.43	0.60	42.57
자유주의	42.25	2.85	0.42	(0.13)	36.50
임노동자	38.00	1.90	0.29	(0.13)	31.00

주: 괄호로 묶인 이텔릭체의 계수값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함.

다음으로는 거시경제에 있어 복지체제별로 어떠한 상황적·제도적 차이를 지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무역개방도는 사민주의 58.25%, 기민주의 54.43%, 자유주의 42.25%, 임노동자체제 38%의 유의미한 수준차이를 보여준다. 자유주의와 임노동자체제보다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체제가 복지국가를 발달시키면서 무역개방도도 높다는 사실은 첫째, 이들 체제에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전략으로 복지국가를 완충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Cameron, 1978; Ahn, 2000), 둘째로, 이들 체제에서 나머지 두 체제보다 경쟁과 복지국가의 양면에서 발생하는 자본가들에 대한 제도적 압박이 심하여 자본가들로부터도 조정된 경제에의 요구와 복지국가에의 수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연결된다(Streek, 1997).

자본자유화 정도는 자본에 대한 규제와 자유화정도를 나타낸다. 자본자유화는 기민주의와 자유주의에서 높고, 나머지 두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은행의 독립 정도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조정지수에는 기업구조합의 파워정도, 기업과 투자자간의 관계성 정도, 구매자와 공급기업간의 관계성 정도, R&D, 교육, 생산, 표준화 등과 관련된 경쟁기업간의 연대성 정도가 포함된다(Hicks and Kenworthy, 1998). 조정지수는 사민주의와 기민주의가 각각 0.72, 0.6으로 자유주의와 임노동자체제의 0.1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총세율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개입의 정도를 의미한다. 보다 직접적인 자본 규제라기보다는 복지국가의 성장과 더 깊은 관련이 있으며 간접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에서 49.25%, 기민주의에서 42.57%, 자유주의 36.5%, 임노동자체제에서 31%로서 사회보장 지출수준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복지체제별 노동시장상황 및 제도

각 체제에서의 노동시장 상황 및 관련 정책제도도 상당히 다르다. 문맹률은 일반적인 교육투자의 결과로서 사민주의와 기민주의체제에서 보다 보편적인 교육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교육의 투자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사민주의에서만 다른 체제보다 유의미하게 큰 지출을 하고 있다. 공공고용율도 사민주의가 다른 체제들보다 평균적으로 3배 가깝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고용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교육과 직업훈련 등예의 인적자본투자와 실업에 대한 공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은 사민주의 체제의 배타적인 특징으로 부각된다.

<표5> 복지체제별 노동시장

체제	문맹률	공공고용	ALMP	여성노동참여
사민주의	8.50	15.50	34.75	69.25
기민주의	13.50	5.00	(10.29)	47.00
자유주의	21.50	6.67	(6.25)	52.75
입노동자	18.50	7.00	(12.50)	49.00

주: 괄호로 묶인 이텔릭체의 계수값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함.

여성의 노동참여정도는 사민주의 69.25%, 자유주의 52.75%, 입노동자체제 49%, 기민주의 체제 47%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기민주의는 남성 부양자 모델에 입각한 노동시장전략을 취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며, 사민주의의 특징인 개인주의적 부 양자 모델의 전략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Sainsbury, 1994, 1996, 1999).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여성해방의 견지에서 진보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 를 줄 수 있다.

3) 경제체제별 성적표

근자의 경제적 범세계화와 세계경제의 수렴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생산레짐과 사 회경제적 불평등, 복지국가, 정치행위자의 조직적 구성 등의 제도적 속성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이 발견된다(Kitschelt et al. 1999; Huber and Stephens 1999). 사회보장체계와 생산체계 사이에는 분명히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경제적 성과와 평등 수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동시에 영향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양자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은 지금까지 살펴 본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지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생산의 특유한 연결고리가 복지자본주의의 두 마리 토끼인 성장과 분배라는 성적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¹⁴⁾ 이제, 아래에서는 이 측면에 보다 집중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1) 경제성장과 실업

경제적 성과는 크게 경제성장과 실업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70년대의 성장률은 기민주의,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순서로 높으며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되지 않고 있지만 임노동자체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다. 1980년대의 성장률을 보면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민주의, 임노동자 체제 순으로 변화한다. 19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위기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가 가시화되는 1980년대를 통해 기민주의는 추락한 반면 사민주의는 여전히 견고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실질 GDP수준은 사민주의에서 가장 높고 기민주의와 자유주의가 유사한 수준이며 임노동자체제에서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률은 자유주의에서 가장 높고 기민주의와 임노동자 체제에서 4%대, 사민주의에서 3%대의 실업률을 보여준다.

<표 6> 체제별 경제적 성과차이

체제	성장률70	성장률80	1인당실질GDP	실업률
사민주의	2.68	2.74	11698	3.68
기민주의	2.70	2.07	11600	4.71
자유주의	2.41	2.48	11605	6.85
임노동자	(1.47)	1.57	11441	4.10

주: 괄호로 묶인 이탤릭체의 계수값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함.

비록 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 역관계를 취하고 있다손 치더라도(안상훈, 2002),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노동비용과 노동동기와 관련된 경제적 행위자들의 미시적 행동방식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부정적(negative)인 것

14) 안상훈(2002)은 Esping-Andersen의 분류에 기초하여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에서의 분배와 성장을 평가한 바 있으나, 여기서의 분석은 4가지 체제를 비교한 것으로 유형화에 관한 인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은 아니다. 사회정책이 노동시장 행위자의 미시적 행위에서 게임의 규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예컨대, 높은 사회적 보호수준은 높은 노동비용을 유발하지만, 높은 노동비용은 고용주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약(beneficial constraint)’으로 기능할 수도도 있는 것이다(Streek, 1997). 왜냐면, 높은 노동비용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고품질생산과 유연한 전문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는 결국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높은 노동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발달된 복지국가체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높은 수준의 복지와 높은 노동비용이 이들 사회의 기업가들에게는 강제적인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발전을 보이는 유럽모델의 경우, 복지국가의 발달수준, 사회적 서비스와 고용간의 관계가 체제에 따라 매우 상이한 방향의 결과를 잉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북구의 사민주의 복지체제와 대륙유럽의 기민주의 복지체제는 모두 발달된 복지지출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지만, 복지지출이 사용되는 사회정책의 종류는 상당히 다르고 동시에 실업률 수준도 차이가 크다. 왜 그럴까? 사민주의는 사회보험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제도적 특징에서 기민주의와 구별된다. 높은 노동비용에도 불구하고, 공부문의 노동수요창출이 가능한 사민주의에서는 복지와 고용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나, 기민주의 체제에서는 공부문의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높은 노동비용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에 역효과만 가지게 된다.¹⁵⁾ 특히,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부터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까닭에 기민주의의 실업문제가 경제적 위기가 심화된 20세기 후반을 통해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근자의 복지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조적 실업인데, 실업은 실업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고용관련 사회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과 같은 사회임금의 재정적 원천을 훼손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는 교육 받고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산레짐에 순방향으로 기능해야만 한다. 예컨대 복지수급 자격권과 기술수준 사이에 높은 공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복지가 높은 수준으로 제공될 경우, 노동자들은 기업특수적인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조정된 경제와 조정되지 않은 경제와 각 복지체제의 사이에는 상당한 연결고리가 확인되며, 각 체제 사이의 차이 역시 상당하다.

실제로 노동시장 결과를 잉태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국가, 자본, 그리고 노동, 이 삼자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Hassel, 2001). 사민주의체제의 높은 고용효과는 조정된 시

15) 서비스부문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높은 노동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Baumol, 1967; Esping-Andersen, 1999).

장경제가 복지국가의 다양한 기제를 통하여 인적자원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특히, 복지국가를 통해 조정된 고용의 유지는 단기적인 직무태만이라는 역기능을 상쇄하고 남음이 있다는 연구도 많다. 장기실업의 역기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노동시장의 완충제역할을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할 경제·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파생하기 때문에 중국적으로 경제성장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관찰도 도처에서 제기된다(Cameron, 1978; Korpi and Shalev, 1980).

(2) 소득재분배 및 모성고용

경제성장에 있어 사민주의 체제의 성공이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전통적 목표인 평등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4가지 체제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표7> 체제별 평등수준의 차이

체제	임금격차	Gini	재분배	노인Gini	노동세대빈곤	모성고용
사민주의	2.15	0.22	41.5	0.22	4.08	58.75
기민주의	2.81	0.28	34.0	0.30	7.16	43.60
자유주의	3.87	0.30	29.5	0.31	9.65	23.67
임노동자	2.85	0.29	29.0	0.29	9.30	(22.00)

주: 괄호로 묶인 이탤릭체의 계수값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함.

임금격차는 자유주의에서 3.87로 월등히 높고, 임노동자체제와 기민주의에서 각각 2.85, 2.81, 사민주의에서 2.15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체제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Gini계수도 사민주의에서 0.22로 가장 평등하며, 자유주의가 0.3, 임노동자 0.29, 기민주의 0.28의 순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분배는 세금 및 이전 후 지니계수 감소 비율의 지표이다. 역시, 사민주의에서 월등한 재분배효과를 보여주며, 기민주의가 그 뒤를 따르고, 자유주의와 임노동자 체제에서의 세금 및 이전의 재분배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노인의 가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도 사민주의에서 가장 낮고 역시 자유주의에서 가장 높다. 노동세대가 빈곤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사민주의에서 가장 낮고, 자유주의에서 가장 높으며, 기민주의가 중간 정도 이다. 모성고용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민주의에서 58.75, 기민주의에서 43.6, 자유주의에서 23.67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절에서 살펴본 평등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민주의의 성공과 자유주의의 실패가 확연하다. 기민주의는 사민주의에 가까운 쪽에서 중간쯤에 위치한다. 임노동자주의는 여러 면에서 자유주의에 근사한 경향이 엿보인다. 이런 면에서는 제4의 체제가 지니는 타당성이 일정정도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적인 체제성격 차이에 있어서는 임노동자 체제의 독특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Crouch(2001)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관계를 ‘제도적 확률주의(institutional probabilism)’로 파악하여, 특정 체제의 발달양상은 특정한 경로를 따르게 될 공산이 크지만 완벽하게 제도적 유산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양자간의 상보성은 확률적으로만 경로의존적이라는 주장이다. Ahn(2000)도 복지유형화가 결국은 서열적인 현상으로서 체제적 특성도 연속적이며 확률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4가지 종류의 복지체제로 나누어, 복지국가와 생산체제의 다양한 변수들의 견지에서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것은 이러한 인식론에 근거한 것이며, 각 복지체제는 투입된 주요 종속변수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확률적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4가지 복지체제를 구분한 것이 일정정도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몇 가지 변수에서 자유주의로부터 배타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가시적인 결과는 사민주의체제의 눈부신 성공과 관련된다. 사민주의체제는 복지지출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강한 복지국가 제도로 특징 지워진다. 동시에 이 체제에서는 노동운동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막강하여 교육이나 훈련 등이 일반교육체계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공공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체제 성격은 생산부문에서 강력한 조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복지국가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체제에 속하는 나라들은 수출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정만이 주어진 게임의 규칙 하에서 채택 가능한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자본에게도 유리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고품질생산과 생산성 향상노력을 가능하게 하였고 경제적 성과도 상당히 높아, 관련 지표에서 다른 체제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등관련 지표와 경제성과 지

표에서 공히 최고의 성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새를 하나의 복지-생산연계 체제라는 돌로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보성의 논리를 상기할 때, 이런 사실은 납득이 가능하다. 시민주의의 경우에 강한 노조는 단체협약과 중앙협상을 통해 기본적인 조합주의(corporatism)적 의사결정의 배경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조정을 하기 쉬운 구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질 좋은 공교육과 직업훈련을 을 무상 혹은 저가에 공급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재분배에도 불구하고 매우 생산적인 인적자본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성장률도 높고 실업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성과가 높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분석된 시기에 있어 시민주의 복지체제는 고도로 조정된 생산레짐과 결합하여 현대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양대 목표인 성장과 분배에서 다른 체제와 비교되지 않는 수준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학계에서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호조응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미진한 이유는 복지국가가 단순히 자본주의의 제도적 보완칙(institutional counter-principle)이라는 학술적 편견에 근거한다. ‘복지국가의 정치’는 시장에 적대적(politics against markets)’이므로(Esping-Andersen, 1985), 복지와 생산 간에는 기본적으로 역관계가 성립된다는 선입견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은 주류 경제학의 복지국가 비판의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좌파 네오맑시즘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해체를 주장하는 근거로서도 우리에게 낯익은 논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편견이 매우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정된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 혹은 제도적 상보성은, 특정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직업훈련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관한 집합적 행동의 문제와 같은 합리적 선택의 상황에 관한 논리적 설명들¹⁶⁾에서도 그 단초가 발견된다(Crouch et al., 1999). 요컨대 복지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적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 역 또한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통해 우리는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조응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수준과 경제적 성과가 반드시 역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16) 사회정책 발전에서 고용주들의 역할이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 받은 바 있다(Martin and Swank, 1999; Swenson, 1997). 특정한 제도적 상황에서 기업이 담지하는 특유한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부분의 기업주, 고용주는 노동자와 계급간 연대(cross-class alliance)를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즉, 고용주는 반복지, 노동자는 친복지라는 이분법에 기초한 기존의 가설이 기본적인 계급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는 일정정도 타당할지라도,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매우 복잡하여 생산레짐에 따라 특정 부분의 기업주들이 강제적 사회보장을 선호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음이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Swenson 1997, 1999, 2000).

참 고 문 헌

1. 김두섭, 강남준 (2000) 회귀분석. 서울:나남
2. 류근관 (2003) 통계학. 법문사
3. 안상훈 (2002)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생산적 복지, 그 성적표: 복지국가의 경제적 효과와 평등전략의 차이에 관한 체제론적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호.
4. Ahn, Sang-Hoon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ppsalaUniversity Press.
5. Allan, J.P. and Scruggs, L.A. (2001) Still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omparing Welfare Regime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Paper presented at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6. Berger, S. and Dore, R. (eds.) (1996) National Diversity and Global Capit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7. Cameron, D. R. (1978)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1243-61
8. Crouch, C. (2001) Welfare State Regimes and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the questionable role of path dependency theory. in Ebbinghaus, B. and Manow, P. (eds.)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the USA. London: Routledge.
9. Crouch, C. and Streek, W. (eds.) (1997) Political Economy of, Modern Capitalism. Mapping Convergence and Diversity. London: Sage.
10. Ebbinghaus, B. and Manow, P. (2001) Introduction: studying varieties of welfare capitalism. in Ebbinghaus, B. and Manow, P. (eds.)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the USA. London: Routledge.
11. Esping-Andersen, G.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13. Esping-Andersen, G. (1992) Contemporary Research on Social Democrac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187-208)
14.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15. Goldthorpe, J.H. (ed.) (1984)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Clarendon Press.
 16. Gujarati, D. N. (1995) *Basic Econometrics*. New York: McGraw-Hill
 17. Hall, P.A. and Soskice, D.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8. Hassel, A. (2001) *The Governance of the Employment-Welfare Relationship in Britain and Germany*. in Ebbinghaus, B. and Manow, P. (eds.)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in Europe, Japan, and the USA*. London: Routledge.
 19. Hollingsworth J.R., Schmitter, P.C. and Streek, W. (eds.) (1994) *Governing Capitalist Economies. Performance and Control of Economic Secto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 Hollingsworth J.R. and Boyer, R. (1997) *Coordination of Economic Actors and Social Systems of Production*, in Hollingsworth J.R. and Boyer, R. (eds.) *Contemporary Capitalism. The Embeddedness of Instit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 Huber, E., Ragin, C. and Stephens, J. D. (1997)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Northwestern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2. Huber and Stephens (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3. Iversen, T. Pontusson, J. and Soskice, D. (eds.) (2000) *Unions, Employers, and Central Banks. Macroeconomic Coordin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Social Market Econom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Kitschelt, H., Lange, P., Marks, G., and Stephens, J.D. (1999)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in Kitschelt, H., Lange, P., Marks, G., and Stephens, J.D. (eds.)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Korpi, W. and Shalev, M. (1980) *Strikes, Power, and Politics in the Western Nations, 1990-1976.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1, 301-24
 26. Lembruch, G. and Schmitter, P. C. (eds.) (1982) *Patterns of Corporative Policy-Making*. London: Sage.
 27. Mishra, R. (1984) *The Welfare State in Crisis*. Brighton: Wheatsheaf
 28. Nielsen, F. and Gaddy, G. (2001) *Pooled Time Series of Cross Sections*.

[<http://www.unc.edu/courses/soci209>]

29. Schmitter, P. C. and Lembruch, G. (eds.) (1981)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verly Hills, CA: Sage.
30. Swenson, P. (1991) Bringing Capital Back in, or Social Democracy Reconsidered. World Politics, 43(4)
31. Titmuss, R. (1974) Social Polic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부표1>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정의와 출처

변수명	변수 정의	출처
사회보장지출	GDP 대비 사회보장급여지출 비중	Huber et. al(1997), ILO
이전지출	GDP 대비 사회보장이전지출 비중	Huber et. al(1997), OECD
공공보건지출	전체 보건지출 중 공공보건 지출 비중	Huber et. al(1997), OECD
공공연금지출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	Huber et. al(1997), ILO
비노인 지출	GDP 대비 비노인인구 대상 지출 비중	OECD
탈상품화	탈상품화 지수	Esping-Andersen(1990)
노조조직률	전체 임금노동자 중 노조 가입자 비율	Huber et. al(1997), Ebbinghaus and Visser(1992)
단체협약률	전체노동자 중 협약임금 담지비율	Traxler(1994)
중앙협상	Iversen 중앙협상지수	Iversen(1998)
조합주의지수	Lehmurch 조합주의지수	Lehmurch(1984)
무역개방도	GDP대비 수출입비중	Huber et. al.(1997)
자본자유화	국가의 내적외적 자본통제	Quinn and Inclan(1997)
중앙은행 독립	중앙은행의 독립성 정도	Cukierman et al.(1992)
조정지수	시장경제의 조정 정도	Hicks and Kenworthy(1998)
총세율	GDP 대비 정부예산 비중	Huber et. al.(1997), OECD
문맹률	읽고 쓰기 능력의 최하위 범주에 속하는 성인 인구 비율	OECD/HRDC(2000), Statistics Canada study
공공고용	전체 노동자 중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	Huber et. al.(1997), WEEP
ALMP	실업률 대비,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	Calculating according to Nickell 1997 by David Bradley
여성노동 참여	15-64세 노동인구 중 여성 비중	Huber et. al(1997), OECD
성장률70	1961-1970년 사이 평균 GDP 성장률	Huber et. al(1997), OECD
성장률80	1971-1980년 사이 평균 GDP 성장률	Huber et. al(1997), OECD
1인당 실질GDP	고정 달러 기준 1인당 실질 국민총생산	Huber et. al(1997), PWT
실업률	전체 노동인구 중 실업자 비중	Huber et. al(1997), OECD
임금격차	임금분포 상 90분위의 임금 /10분위의 임금	The OECD Jobs Study : Evidence and Explanation(1994)
Gini	가처분 소득에 대한 세후 이전후 지니계수	Mitchell(1991), LIS
재분배	세금 및 이전 후 지니계수 감소 비율	Mitchell(1991), LIS
노인Gini	노인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	Mitchell(1991), LIS
노동세대빈곤	가처분 소득이 평균 가처분소득의 50% 이하인 24-60세 가구주의 비중	Mitchell(1991), LIS
모성고용	출산휴가/육아휴직정책과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적용범위와 급여수준, 법적 보장정도	Gornick, Meyers, and Ross(1997)